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의 내용 및 영향분석

1997. 10

배 정 호

(안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 배경	2
III.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과 특징	4
1. 제1차 중간보고안	4
2. 제2차 중간보고안	5
3. 최종 확정안	7
IV.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13
1.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3
2. 동북아질서에 미치는 영향	14
V. 한국의 고려사항	17
1.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주도적 입장 확대	17
2. 한·일 안보협력 체제의 확립	18
3.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19

I . 문제제기

- 탈냉전시대의 신국제질서기에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regional level) 및 세계 차원(global level)에서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고,
- 이에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일안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1996년 4월 17일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동맹」(이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라 칭함)을 채택하였음.
- 미국과 일본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 1978.1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는 한편, 제1차 중간보고안, 제2차 중간보고안, 그리고 최종확정안인 新「방위협력지침」를 작성·발표하였음.
-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은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강화 및 광역화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에 목적을 둠.
- 본 보고서에서는 (1)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 배경, (2)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과 특징, (3)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 배경

-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동반자임.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과의 책임분담을 통하여 안보비용 경감과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불가결함.
 - 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와 역할분담은 대중국 견제능력을 강화 시킴.
 -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틀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억제함.

- 일본은 국제적 역할증대를 통한 정치대국으로의 성장을 위해 미·일동맹체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에 응하여 미국과의 책임분담을 이행하면서 아시아를 거점으로 정치대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국의 패권추구 및 군사력 증대 등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필요함.
 -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일안보협력이라는 명분이 필요함.

-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은 美국방부가 1995년 2월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EASR)이나 동년 11월 일본이 발표한 '新防衛大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 뒤,
 - 1996년 4월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과 그 후속조치인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 1978.11)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효과적인 방위협력지침이 필요했음.

Ⅲ.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과 특징

1. 제1차 중간보고안

- 1996년 9월 19일 美국무성에서 미·일의 외무, 방위각료는 안보 협의회(2+2)를 개최, 「방위협력 소위원회」(SDC, <표 1>참조)가 작성한 「방위협력지침」개정을 위한 제1차 중간보고안을 승인함.
- 제1차 중간보고서는 미·일간의 주요협의 사항을 (1) 평시의 협력 (2) 일본에 대한 무력침공시의 대처능력 (3)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의 유사사태에 대한 협력 등의 세항목으로 대별하였음.
 - 일본주변 유사시 일본의 대미협력 검토항목과 관련, (1) 비전투원을 대피시키기 위한 활동 (2) 미군의 일본 국내시설·구역 사용 (3) 병력수송 등 미군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 (4) 자위대와 미군의 쌍방 운용 등을 제의하였음.
 - 현행 「방위협력지침」의 ‘극동’이라는 표현대신 ‘일본주변’이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미·일 협력범위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일본의 대미지원 범위 및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표 1〉 「방위협력 소위원회」(SDC)의 참가자

일본측	미국측
방위청 방위국장 (공동의장)	국방차관보 (국제안전보장정책 담당, 공동의장)
외무성 북미국장 (공동의장)	국무차관보 (동아시아 담당, 공동 의장)
통합막료회의 대표	통합참모본부 태평양군의 대표

2. 제2차 중간보고안

- 1997년 6월 7일(현지시간)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는 「방위협력지침」개정을 위한 제2차 중간 보고안을 발표하였음.
- 「방위협력지침」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역점을 둔 제2차 중간보고안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은 물론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대한 미·일협력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음.
 - 미·일 방위협력의 중점이 종래의 '일본유사' 및 '극동유사'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유사'로 규정된 점이 최대의 특징임.
- 지금까지 공백상태에 있었던 일본주변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미·일은 주변공해 및 그 상공에서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광범위

한 협력사항을 6개 분야 40개 검토항목으로 제시하였음.

- 제2차 중간보고안은 일본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하였음.
 - 일본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의 제2차 중간보고안에 대한 국회논의과정에서(1997.6.10~16) 일본주변해역에서의 자위대의 미군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 제2차 중간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자민당 안보조사회(회장 카와라 前방위청장관)는 자위대의 미군지원 분야를 <표 2>와 같이 구별하였음.

<표 2> 자민당분류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분야

Red Zone (현행 헌법상 지원 가능 영역)	遺棄기뢰제거, 일본방위를 위해 수집된 정보제공, 재외일본인 구출을 위한 일본 항공기내 미군 동승, 불시착 미군기 연료보급, 주일 미군기지 경비 등
Gray Zone (애매한 영역)	미국 함정·항공기 호위, 전투지역 부근 보급, 정비·수송활동, 전투지역내 의료활동, 탄약보급·보관, 초계·감시·정찰활동에 기초한 정보제공 등
White Zone (불가능한 영역)	전투행동참가, 전투해역기뢰제거, 전투지역내 후방지원

3. 최종 확정안

- 1997년 9월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는 「방위협력지침」의 개정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였음.
- 제2차 중간보고안과 비교하여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의해 파악되는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한 점임.
 - 또 '선박 임검'에 대해서는 "UN결의에 따라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였음.
 - 그리고 '비전투원 수송'문제는 미·일이 각기 자국민의 소개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태시에는 양국이 협력토록 조정, 미국측의 협력을 명시하였음.
- 최종 확정안에 따라, 新舊 「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표 3>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음.
- 최종확정안에서는 제2차 중간보고안에서 제안되었던 6개 분야 40개 항목을 검토하여 <표 4>와 같은 '일본주변 유사시 협력항목'을 제시하였음.

〈표 3〉 新·舊「방위협력지침」의 비교

상황	舊지침('78.11)	新지침('97.9)
평상시 (침략 미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자위를 위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고 미군시설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노력 ○ 미국은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동시에 즉각 대응부대 전방 전개, 증원병력 보유 ○ 양국은 무력공격 대비, 작전·정보·후방지원분야 협력 태세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자위력을 유지, 미국은 핵억지력과 전방전개 병력유지 및 지원병력 보유 ○ 국제정세 정보교환 확대, 방위정책·군사태세 관련 협의 및 공동훈련 강화, 미·일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 PKO 및 인도적 국제구원 활동 협력
일 본 유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한정적·소규모 침략을 자력 격퇴하고 자체역량으로 격퇴 곤란시 미국의 협력으로 격퇴 ○ 자위대는 주로 일본의 영역 및 주변해역 방어, 미군은 자위대 작전 지원 및 기능 보완 ○ 자위대와 미군은 각기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 ○ 보급·수송·정비·시설제공 등 후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주도적으로 침략을 조기 배제하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절히 협력(최초 단계부터) ○ 左同 ○ 자위대와 미군은 적시에 적절하게 각기 방위력 운용 ○ 左同 및 C4I시스템(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향상 노력

상황	舊지침('78.11)	新지침('97.9)
일 본 주 변 유 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이외의 극동지역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군에 대한 편의 제공방법 공동연구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협력방안 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방위범위: 극동→일본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사태 개념에 대해서는 대만문제개입을 우려하는 중국측 반발을 고려, 지리적 개념이 아닌 상황에 근거(not geographic but situational)함을 명시 ○ 주변유사시 협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정보 제공, 영해 및 일본선박의 안전항해 등을 위한 공해상 기뢰 소해, UN 결의에 따른 수상한 선박 임검 실시 등 작전협력 - 기지·시설 추가 제공, 민간공항항만사용, 보급수송정비·의료경비 등 후방지원 - 일본 영토내 또는 전투지역에서 벗어난 해역에서의 조난 병사 수색·구난 - 분쟁시 양국이 각자 자국민 소개를 우선하고 사태에 따라 양국이 협력하여 대응
향 후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부는 공동작전계획, 상호협력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통의 기준과 실시요령 등을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인 메카니즘」을 구축함. 양정부의 관계기관이 관여함. ○ 양국 정부는 긴급사태시의 활동에 관한 조정을 위하여 평시부터 「조정 메카니즘」을 구축해 둠.

〈표 4〉 일본주변 유사시 협력대상이 되는 기능분야·협력항목

기능분야	협력항목의 예
구원활동 및 피난민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지역으로 인원 및 보급품 수송 ○재해지역에서의 위생, 통신 및 수송 ○피난민 구호 및 수송활동, 피난민에 대한 응급 물자 지급
수색·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영역 및 일본주변 해역에서의 수색·구난활동 및 이에 관한 정보교환
미·일 양국 정부가 각자 주체적 으로 행하는 활동 에서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교환, 비전투원과의 연락, 비전투원의 집합·수송 ○비전투원 수송용 미항공기·함선의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 사용 ○비전투원의 일본입국시 통관, 출입국관리 및 검역 ○비전투원의 일본내 일시 숙박, 수송 및 위생에 관한 지원
국제 평화안 정 유지를 목적으로하 는 경제제재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에 관련된 활동 ○정보교환

기능분야		협력항목의 예	
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	시설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등을 목적으로한 미항공기·선박의 자위대 시설 및 민간공항·항만 사용 ○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에 있는 미국의 인원보호 및 물자하적에 필요한 장소 및 보관시설 확보 ○ 미항공기·선박사용을 위한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 운용시간의 연장 ○ 미항공기의 자위대 비행장사용 ○ 훈련·연습구역 제공 ○ 미군시설·구역내 사무소·숙박소 등 건설 	
	후방 지역 지원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에서 미항공기·선박에 대한 물자(무기·탄약 제공) 및 연료·유지·유탄유제공 ○ 미군시설·구역에 대한 물자(무기·탄약 등은 제외) 및 연료·유지·유탄유제공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물자 및 연료·유지·유탄유를 일본국내에서 육상·해상·항공으로 수송 ○ 공해상의 미국선박에 대하여 인원, 물자, 연료·유지·유탄유를 해상으로 수송 ○ 인원, 물자 및 연료·유지·유탄유 수송을 위한 차량 사용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항공기·선박·차량의 수리·정비 ○ 수리부품제공 ○ 정비용 기자재의 일시제공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국내에 있는 상병자치료 ○ 일본국내에 있는 상병자수송 ○ 의약품 및 위생기구제공

기능·분야		협력항목의 예	
미 군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	후방 지역 지원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시설·구역경비 ○미군시설·구역 주위의 해역 경계감시 ○일본국내 수송경로 경비 ○정보교환
		통신	○미·일양국 관계기관간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위성통신용 포함) 확보 및 기재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선박출입항에 대한 지원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에 있는 물자하적 ○미군시설·구역 오수처리, 급수, 급전 등 ○미군시설·구역 종업원의 일시 증원
운 용 면 에 서 의 미·일 협 력	경계감시	○정보교환	
	기뢰제거	○일본영역 및 일본주위의 공해 기뢰의 제거 및 기뢰 정보의 교환	
	해·공역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영역 및 일본주변해역의 교통량 증대에 대응한 해상운항조정 ○일본영역 및 일본주변 공역에 있는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정비 	

IV.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1.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 간사장이 1997년 7월 16일 미·일 「방위 협력지침」 개정작업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강조하였듯이, 新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표 5> 와 같이 (1) 일본영해·공해상 역할과 (2) 국내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일본은 주일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공해상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기뢰제거에 일본 소해정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임.

〈표 5〉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역할

일본영해·공해상 역할	국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검문·검색* ○기뢰제거 ○미군에 탄약·무기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에 인원·물자·연료수송 ○미군의 공항·항만 이용 ○미군에 의료·통신지원

* 선박의 검문·검색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

- 일본주변지역 유사시에 대비, 미·일간 군사협력이 확대·강화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반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는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특히 동북아에 “미·일 vs. 중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경우, 이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동북아질서에 미치는 영향

- 舊소련 붕괴이후 냉전시대 미·소·중·일간의 “느슨한 4강체제”는 무너지고 미·일·중간의 “新3角關係”구도가 동북아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등장했음.
 - 미·일안보체제 강화는 ‘21세기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 냉전시대에 미·소를 축으로 형성되었던 동북아 국제질서가 21세기의 탈냉전시대에는 ‘미·일 vs. 중국’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대체될 것임.

- ‘미·일 vs. 중국’을 축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형성될 경우, 오키나와기지는 계속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임.
 -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2,000해리 이내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직접 출동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임.

-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대만 및 한반도유사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함.
 -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 한반도긴급사태 대비
 - 오키나와 주둔 해군 및 공군 ; 대만긴급사태 대비
 - 장기적으로 주임무는 중국견제 및 봉쇄

- 오키나와기지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미·일 공동대응 영역이 ‘극동 유사’에서 ‘주변유사’로 확대되고, 미·일 양국이 일본주변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6개 분야 40개 항목에서 협력하므로, 미·일 안보체제의 전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위대의 전력 및 역할은 강화됨.

- 미·일안보체제의 광역화 및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는 동북아 지역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제2차 중간보고안 발표이후 중국은 미·일안보체제의 대상범위 확대에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였고, 최종안 발표후에는 매우

민감하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특히 1997년 9월 25일 중·일 뉴욕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외상에게 “대만해협이 적용범위 대상일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

○ 중국은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을 ‘중국포위망’구축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미·일견제를 위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추진.

- 그러나 러시아는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최대한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므로, 일본의 세력확대보다는 미·일에 의한 중국 견제효과를 더 크게 평가하고 있음.

V. 한국의 고려사항

1.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주도적 입장 확대

- 현재 평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에 속해 있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국에 속해 있으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국의 지휘체계하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하게 되었음.
-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은 미국의 전략적 틀속에서 제약을 받게 되고,
 - 아울러 한·미 공동 방위체제는 '일본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미·일안보체제'에 의존하게 되었음.
-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전력을 질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반환받아야 할 것임.
 - 즉 한반도 유사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미·일 동맹을 활용해야 할 것임.
-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에서 전개되는 '미·일 군사전략'이 한국의

군사적 역할에 질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2. 한일 안보협력 체제의 확립

-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국의 영해, 공해상에서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므로, 한·일간에는 空域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상황이 매우 긴급한 경우, 空域조정이 무의미해지고 자위대의 활동이 한국영해로 확대될 수도 있으며,
 - 공해상에 활동중인 자위대가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자위대와 북한군간에 직접 전투가 전개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긴급상황시 자위대의 역할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한·일 양국은 항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안보협력을 위하여 양국간의 신뢰조성과 더불어 안보협력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1996년 4월 14일 한·일양국 외무장관이 창설키로 합의한 바 있는 양국 정부간의 안보협의기구인 「한·일 안보대화」의 구체적 운용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일간 군사협력”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한·일 안보대화」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일 안보대화」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997년 9월 24일 한국 외무장관이 일본 외무장관에게 제의한 「한반도 유사시 한·일협의체」를 「한·일 안보대화」내에 설치함으로써 다층적인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 동북아 지역내의 군사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평화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관리할 수 있으며,
 - 중국·일본 등 관계국가들의 군사력 및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한·미관계를 주축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중·러와의 우호관계 유지와 신뢰관계 조성을 위해 군사교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주변4강 각국과의 양자간 신뢰구축은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양자간 신뢰구축을 위해 동북아 안보협의체 관련국가들과 인적교류, 정보교환, 안보관련 세미나개최 등을 활발히 전개함.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5,7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4,5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5,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5,5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4,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 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 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 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혹은 우편으로 보내 주시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임.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연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586, 901-2613, FAX: 901-2547)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의 내용 및 영향분석

統一情勢分析 97--0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安保政策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2526(代), FAX: 901-2547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7년 10월 일

發行日 1997년 10월 일
